

일본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구조의 변화*

김 창 남

이 논문은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축진과 고용구조의 변화는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일본경제의 발전'메카니즘'과 그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 1970년대 초 이후 일본산업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하에서 감량경영을 중심으로 한 합리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자원집약적 기초소재산업에서 기술집약적 가공조립산업으로 전환시켜왔다. 더욱이 85년 중반까지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입저지적이고 수출의존적인 '일팔자급형' 생산체제를 강화하여왔으나, 85년 이후의 급속한 엔고를 반영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과 제품수입의 증대로 이러한 생산체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소위 '산업공동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에 의하여 생산부분의 고용은 안정되었고, 기업활동의 다각화에 의한 서비스부분의 확대로 고용구조의 서비스화와 직업구조의 '화이트 칼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의 실패'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형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확대 등에 의하여 조정비용으로서의 실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고용과 직업의 구조를 고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I. 서 론

전후 일본경제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극심한 노동부족에 의한 급속한 임금인상과 지속적인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더구나 제1차 석유파동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정부는 당시까지 20여년에 걸쳐 추구하여왔던 고도성장의 구도를 저성장구도로 정책전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안정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수반된 주요정책과제는 고도성장기에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보호주의적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구축된 '중후장대'(重厚長大)의 자원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경박단소'(輕薄短小)의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응하여 개별산업 및 기업차원에서는 감량경영으로 대표되는 경영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이 글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하여주신 서울대학교의 안병직·이천표 두 교수님과 KAIST의 윤정로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합리화를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더구나 70년대 말의 제2차 석유파동과 85년의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은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둔 산업 및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성력화(省力化)에 중심을 두었다. 전자는 노동력 부족과 엔고(円高)에 대처하는 구조조정으로서 특히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후자는 자원파동에 대처한 것으로서 자원 및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집약적 가공조립산업 중심의 생산구조로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기업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으로서, 플라자합의 이후 급속도로 전개된 엔고와 누적적으로 확대된 국제수지흑자의 삭감대책으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기업경영의 다각화,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제품차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은 높은 임금수준과 엔고, 그리고 대외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후자는 내수확대와 아울러 생산구조의 첨단화에 의한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70년대 초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온 산업의 합리화, 성력화,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등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그 자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은 소위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함으로써 대량실업을 발생시켜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개되어온 구조조정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까닭에 일본은 마찰적 실업의 발생이라는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정보화와 서비스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여 고용구조에서는 기술·정보·지식 전문종사자를 중심으로 서비스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본고는 과연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왔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촉진과 고용구조의 서비스화는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일본경제의 발전 '메카니즘'과 그 구조적 특징을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조정정책의 수립이나 기업경영전략의 구축에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2장에서는 먼저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불황산업의 합리화과정과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내수주도형 성장구조로의 전환과정을 개관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산업별 실질자급도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조

조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형태를 가시화하고, 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과정과 고용조정에 대한 정책지원 및 노사간 협력관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취업구조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여왔으며, 특히 구조조정의 주대상인 제조업의 고용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서비스부문 고용증가의 내용과 원인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구조조정의 배경과 지원정책

1. 불황산업 구조조정정책의 전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말까지 연평균 10% 전후의 높은 실질경제성장률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고도성장은 5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 의하여 보호육성된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수출촉진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심각한 공해문제, 노동부족 및 격렬한 노동쟁의의 결과로 나타난 급속한 임금인상, 고도성장에 의하여 유발된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개발정책과정에서 초래된 부문간·지역간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 일본은 당시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더구나 70년대 초의 제1차 석유파동은 자원다소비형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펄프 등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주도하여 왔던 기초소재산업의 불황을 초래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일본경제는 70년대 초부터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엔화의 지속적 평가절상과 아울러 70년대 말의 제2차 석유파동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는 일본이 산업구조를 자원다소비형에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절약·기술집약형 가공조립산업 중심으로 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¹⁾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정부는 산업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조정정책은 구조적 불황업종의 조정원조, 고도기술(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투자 촉진, 그리고 무역마찰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78년 과잉생산능력과 신흥공업국의 추적으로 타격받는 불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불황산업안정 임시조

1) 여기에서의 논의는 주로 金昌男, 『日本の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년, 2장 및 伊藤元重 外, 『産業政策の經濟分析』, 東京大學出版會, 1988년, pp. 25-32을 참조.

치법」(特安法)이 제정되었다. 이 특안법에 기초하여 과대한 생산능력을 보유한 동시에 과반수의 기업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던 알루미늄제련, 합성섬유, 조선, 지류·펄프, 면방직, 화학비료 등 14개 산업이 '구조불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다. 첫째, 구식설비를 갱신하고 과잉설비폐기에 필요한 신용기금을 설립한다. 둘째, 이러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 과잉설비를 폐기하기 위하여 '카르텔'을 결성할 경우 이것을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카르텔'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특안법과 함께 「특정불황산업이직자 임시조치법」(特離法, 업종)과 「특정불황지역이직자 임시조치법」(特離法, 지역), 「특정불황지역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企業城下町法)이 5년간 시한입법으로 제정되었다. 특정업종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리법은 공히 구조불황업종으로부터의 고용전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환을 위한 휴업수당이나 재훈련비용을 사업주에게, 또 노동자의 고용보험금급부를 고용자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기업성하정법은 구조불황업종(대기업)과 관계된 하청중소기업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와 세제상의 우대조치(가속감가상각, 결손금계상 등)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에 힘입어 일본산업은 한편에서는 과잉설비를 폐기하거나 또는 낙후된 설비를 갱신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IC·컴퓨터·항공기 등 주요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정기계정보산업 임시조치법」(特振法)이 78년 제정되었다. 후자에 의해 새로운 첨단산업부문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이 시행되면서 산업구조는 급속하게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은 불황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83년 특안법 등 관련입법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업조정정책의 개선 및 연장을 목적으로 또다시 5년간 시한입법으로 「특정산업구조개선 임시조치법」(産構法), 「특정불황업종·특정불황지역관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임시조치법」(新特離法), 「특정불황업종관련지역대책 임시조치법」(新企業城下町法)을 제정하였다.

산구법에 의하여 설비처리와 아울러 위험회피적 조치가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사업집약화를 위한 사업계휴, 합병, 사업전환을 지향하는 연구개발투자지원이 추가되었다. 또 조선업이 지정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제2차 석유파동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석유화학산업이 추가되었다. 신평리법이나 신기업성하정법도 이직 전의 조정원조, 신분야·신시장·신기술개척을 위한 조성이라는 형태로 실업의 사전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산구법은 87년 「산업구조전환원활화 임시조치법」(圓滑化法)으로 계승되면서 '지시카르텔'을 폐지하고, 기업의 자주적 전환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세계상의 우대조

치 확대를 시도하였다. 원골회법에서는 알루미늄제련, 석유화학, 지류·펄프, 합성섬유가 지정업종에서 제외되었다(山澤逸平·平田章編, 1991:34-36).

2. 산업합리화와 구조조정의 실태

이상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하에서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산업 및 기업에서의 합리화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기업행동을 의미하며, 해당산업이나 기업내 구조조정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생산비절감, 생산성향상,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70년경까지 지속된 고도성장기에 합리화는 신기술이나 그와 관련한 시설도입에 의한 규모의 경제나 생산능력의 확대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고,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는 60년대 말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무역수지의 흑자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국제경제요인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운영방법의 모색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일본의 산업 및 기업은 생산비절감, 그리고 생산요소 특히 노동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개발에 합리화의 주요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종류의 합리화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도성장기 일본의 공업부문은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60년대 국제원유가격의 안정화를 배경으로 에너지 의존도를 상승시켜왔다. 73년 당시 일본의 1차에너지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가격의 폭등은 철강이나 제련,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인 기초소재산업의 생산비를 대폭 인상시켰다. 더욱이 70년대 초의 높은 임금인상과 급속한 엔고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국내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초소재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기업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감량경영'으로 일컬어지는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① 고용량의 억제와 노동비용의 절감, ② 금융비용(금리부담)의 절감, ③ 그 외의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경영의 합리화 노력으로 집약될 수 있다.²⁾

첫째, 고용량 억제 및 노동비용 삭감과 관련하여 기업은 우선 파트타임 노동자를 정

2) 1970년대 초 이후 일본기업 감량경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中村隆英(1982:349-359), 金森久雄(1990: 229-318), 橋本壽朗(1991: 771-135)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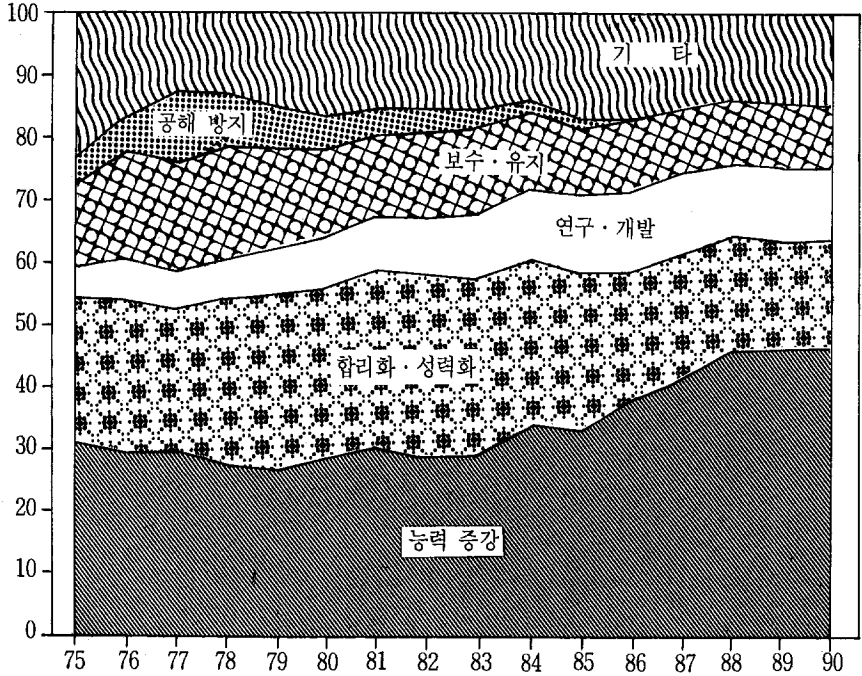
리한 후 퇴직자의 충원억제, 기고용자의 배치전환, 계열기업으로의 전보,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 종신고용제와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원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고용억제노력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어 73년 1,536만명에 달하였던 제조업취업자는 75년 1,422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104만명이나 감소하였다. 고용측면에서의 감량경영은 사양산업이었던 섬유·의복산업과 기초소재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금융비용과 관련해서 볼 때 일본기업은 고도성장기에 전락산업에 대한 투융자상의 우대조치를 장기간 실시한 결과 타인자본비용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황은 기업의 재고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또 단기차입금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기업은 타인자금의 차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노력하였다. 정부의 금리인하조치는 금융비용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70년대에 들어 인플레이제를 위한 금융긴축과정에서 공정한인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73년 11월에는 9.1%에 달하였다. 그후 불황의 타개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공정한인율을 73년 9.1%에서 78년 3월에는 전후 최저치인 3.5%까지 인하시켰다.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70년대 초 이후 제2차 석유파동기까지 대폭 인하되어 기업의 금융부담, 특히 금리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셋째,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화노력으로 재고관리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재고를 최소화하고, 공해방지시설투자 이외의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억제하면서 기존시설의 가동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대규모 고용삭감에 대응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그로 인한 생산성향상, 에너지 및 중간투입율의 절약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었다. 특히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차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73년 당시 80%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55%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다소비형인 기초소재산업의 에너지소비지수는 70년 100에서 1990년 30으로 크게 저하하였다(金昌男, 1992:114-118).

이상과 같이 일본기업은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까지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불황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일본개발은행의 조사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투자동기를 나타낸 <그림 1>에 의하면, 이 시기 투자의 주요목적이 기업합리화에 있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규모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능력 증강은 83년 경까지 평균 30% 전후의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억제된 반면, 합리화·성력화·성에너지화를 위한 투자는 그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경향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또한 70년대 후반의 공해방지시설투자 팽창과 7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주

〈그림 1〉 제조업부문의 투자동기 (%)



자료 : 日本開發銀行, 『調査』, 第147號, 1991년 3월호, 東京에 의거 작성.

목할 만하다. 그리고 84년 이후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투자는 축소경향을 보이는 반면, 생산능력의 증강을 위한 투자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83년까지의 합리화과정에서 제조업부문의 상당수가 구조조정을 이루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첨단기술제품 생산분야로 전환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80년대 초까지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은 감량경영으로 일컬어지는 노동비용과 금융비용의 절감, 그리고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을 수반한 자원절약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일본산업은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과 엔고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흑자규모가 누적적으로 확대되면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3. 내수주도형 호황국면으로의 조정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후 전개된 급속한 엔고였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구조조정지침을 제시한 「마에가와(前川) 리포트」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71-73년, 76-78년, 85년 이후 최근까지 세 번에 걸친 급속한 엔고를 경험하였다. 엔화의 대달러환율은 71년 1/4분기 평균 358엔이던 것이 동년 2/4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73년 2/4분기에는 265엔을 기록하였으며, 엔화의 평가절상율은 35.1%에 달하였다. 73년 4/4분기부터 환율은 상승하여 75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 후, 76년 1/4분기부터 다시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4/4분기에 평균 304엔이던 환율은 78년 4/4분기에 평균 190엔으로 하락하여 엔화가 60.0%나 평가절상되었다. 79년부터 환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85년 1/4분기까지 평균 240엔 전후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플라자합의 이후 환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였고, 85년 1/4분기 평균 257엔이던 환율이 93년 4/4분기에는 105엔으로 급락하여 양시점간의 엔화의 평가절상율은 144.8%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80년대 중반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엔고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급속하게 약화시켰음은 물론, 지금까지 30여년간 유지된 수입억제적이고 수출의존적인 일괄자급형(一括自給型) 생산구조에 일대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86년 4월에 「마에가와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마에가와 리포트」는 85년 10월 일본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으로 설치한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조정연구회'의 토의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로서, 이 연구회의 좌장을 역임한 전 일본은행총재 마에가와 하루오(前川春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보고서는 86년 4월 발표된 이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서이다.³⁾ 「마에가와 리포트」는 경상수지흑자가 85년 GNP대비 3.6%의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폭적 경상수지불균형이 계속되는 것은 일본의 경제운영을 위해서나 세계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나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기본인식 하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구조조정을 제안하였다. 즉 국제협조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시도함과 동시에 수출입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환율의 유지 및 안정화가 필요하고,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며,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기

3) 이하의 논의는 矢口芳生·岩城成行編(1990: 3-21), 小池洋一編(1992: 8-30), 池田勝彦(1992: 119-125) 등을 참조.

존의 저축우대세제 등과 관련한 세제전반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산업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시장원리를 통하여 구조조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①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② 석탄광업을 축소하는 대신 수입을 확대하며, ③ 농업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추진하는 반면 기간상품을 제외한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고, ④ 소비구조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 제기되었다.

〈그림 2〉 엔화의 대달러 환율추이 (분기별)



자료 : 經濟企劃廳, 『經濟白書』, 東京, 各年판에 의거 작성.

그리고 87년 4월 경제심의회가 건의한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인 「신(新)마에가와 리포트」가 제출되었다. 이 지침은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경상수지흑자의 대 GNP비율을 가능한 빠른 속도로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인식 하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① 주택, 사회자본정비, 토지대책, 구

조조정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보다 확대한다. ②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③ 해외직접투자, 내외경쟁조건의 정비, 수입확대, 시장접근의 개선,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농업정책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산업구조를 구축한다. ④ 사업전환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한다. 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⑥ 국제협력의 추진, 경제 및 기술협력의 추진, 신라운드의 적극적 추진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마에가와 리포트」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정부는 86년 4월 공익사업 등의 시행촉진, 중소기업대책 등의 촉진, 금리인하를 포함한 금융정책의 기동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에는 적자기업의 금리부담경감과 고용조정조성금의 저정기한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대책과 고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특별대책은 급속한 엔고와 심각한 통상마찰에 의하여 침체된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으나, 특히 저금리정책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보다 오히려 지가폭등과 주가상승 등 투기적 동기를 자극하는 결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80년대 중반 이후 사상 유래없는 지속적 엔고에 의한 산업경쟁력 약화를 저지하고 대외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제안과 그에 따른 특별대책은 결과적으로 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엔고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촉진과 아울러 제품차별화·고부가가치화·기업경영의 다각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보다 첨단화되었다.

특히 「마에가와 리포트」가 발표되고 난 후 일본정부는 구조조정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86년 12월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기반정비를 주요목적으로 한 「특정지역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고, 87년 4월에는 구조조정 진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완화하고 산업구조전환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소위 원골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본의 산업구조를 국제경제환경과 조화시키려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진행된 85년 이후의 급속한 엔고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큰 타격을 준 반면에 내수확대에 의한 호황을 가져왔다.

70년대 초 이후 일본경제는 저성장단계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였다. 70년대 이후의 실질경제성장율을 계산하여 보면 74-80년간 연평균 3.9%, 80-85년간 연평균 3.7%, 85-89년 4.7%였다. 85년 이후의 경제성장율은 60년대 말까지 연평균 10% 전후의 실질경제성장율에 비하면 1/2에 불과한 것이지만, 저성장기에서는 적어도 1%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율은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하여 달성된 것인가. 이것을 국민경제 계산방식에 의하여 경제성장율에 대한 순해외수요의 기

역율로 계산하여 보면,⁴⁾ 74-80년간 연평균 19.6%에서 80-85년간 연평균 23.3%로 경제성장에 대한 순해외수요의 기여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85-90년간에는 -13.8%로 나타나 순해외수요는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시기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율이 순해외수요의 마이너스값을 상쇄하고도 남는 왕성한 국내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달성되었으며, 아울러 80년대 중반까지 순해외수요 증가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던 경제구조가 85년 이후 급속한 엔고에 의하여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엔고호황을 가져온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엔고가 교역조건을 개선하여 실질구매력을 제고시켰다. 둘째, 저금리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택투자를 촉진시킨 한편, 금리인하는 토지나 주식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산효과에 의하여 소비 및 주택투자가 증대하였다. 셋째,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었다(小池洋一, 1992:10). 이러한 엔고요인에 의하여 일본경제는 86년 이후 내수주도에 의한 호황국면으로 구조조정을 이루었다. 더구나 엔고에 의한 대외구매력 향상으로 제품수입이 급속도로 확대된 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엔고영향의 확대는 일본의 독특한 산업생산구조인 일괄자급형 생산체제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산업구조의 전환과 고용조정

1. '일괄자급형' 생산체제의 붕괴

전후 일본은 1차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에서 높은 실질자급율을 실현함으로써 무역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전부문 수출산업화라는 특수한 무역구조를 형성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일국의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출구조 또한 고도화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산업구조가 높은 실질자급도를 실현하였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4) 국민소득(Y)= $C+I+X-M$ 에서 경제성장율($\Delta Y/Y$)은

$$\frac{\Delta Y}{Y} = \frac{\Delta(C+I)}{(C+I)} \cdot \frac{(C+I)}{Y} + \frac{\Delta(X-M)}{(X-M)} \cdot \frac{(X-M)}{Y}$$

여기에서 우변 제1항은 경제성장율에 대한 국내수요의 증가분이고 제2항은 순해외수요(순수출)의 증가분이 된다. 이 추계결과는 1985년 불변가격에 의한 것이다. 기초통계자료는 經濟企劃廳, 『國民所得計算年報』, 東京, 各年판을 이용.

매우 낮은 반면 수출의존도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국의 산업별 실질자급도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는 레온체프가 고안한 ‘스카이라인 맵’(Skyline Map)에 의한 분석이 유용하다(Leontief, 1966). 이것은 산업간 투입·산출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분석이며, 스카이라인분석에 의한 실질자급도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국경제의 소비수요(C)와 투자수요(I)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산출량의 증가분(X_{C+I})은

$$X_{C+I} = (I-A)^{-1}(C+I)$$

단 $(I-A)^{-1}$ 은 레온체프 역행렬 ①

그 경제가 수출(E)을 하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산출증가분(X_E)는

$$X_E = (I-A)^{-1}E \text{ ②}$$

또 일정량의 수입(M)에 의해서 감소되는 산출량(X_M)은

$$X_M = (I-A)^{-1}M \text{ ③}$$

등의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실제 국내총산출량 X와 X_{C+I} , X_E , X_M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항등관계가 성립한다.

$$X = X_{C+I} + X_E - X_M \text{ ④}$$

④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실제의 국내총생산(X) = (국내최종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산출량 X_{C+I})
+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출량 X_E)
- (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할 산출량 X_M).

여기에서 ④식의 양변을 X_{C+I} 로 나누어준 실질자급율(S)는

$$S = \left(\frac{X_{C+I}}{X_{C+I}} \cdot 100\right) + \left(\frac{X_E}{X_{C+I}} \cdot 100\right) - \left(\frac{X_M}{X_{C+I}} \cdot 100\right) \\ = 100 + S_E - S_M \text{ ⑤}$$

따라서 특정산업에서 수출=수입 즉 $X_E = X_M$ 이면 ⑤식의 우변은 100이 되며, 이 경제에서는 생산된 국내총생산량이 국내최종수요(C+I)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산출량 X_{C+I} 와 같게 된다. 즉 자급율(S)은 100%가 되는 것이다($S=100$). 그러나 만약 특정산업에서 $X_E > X_M$ 이면 $S_X > S_M$ 이 되어 자급율(S)은 100%를 상회하며, 반대로 $X_E < X_M$ 이면 자급율(S)은 100%이하가 된다.⁵⁾

5)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산업연관표는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에 수입이 포함된 경쟁수입형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생산은 수입을 공제한 것이 됨.

(표 1)

일본의 산업별 실질자급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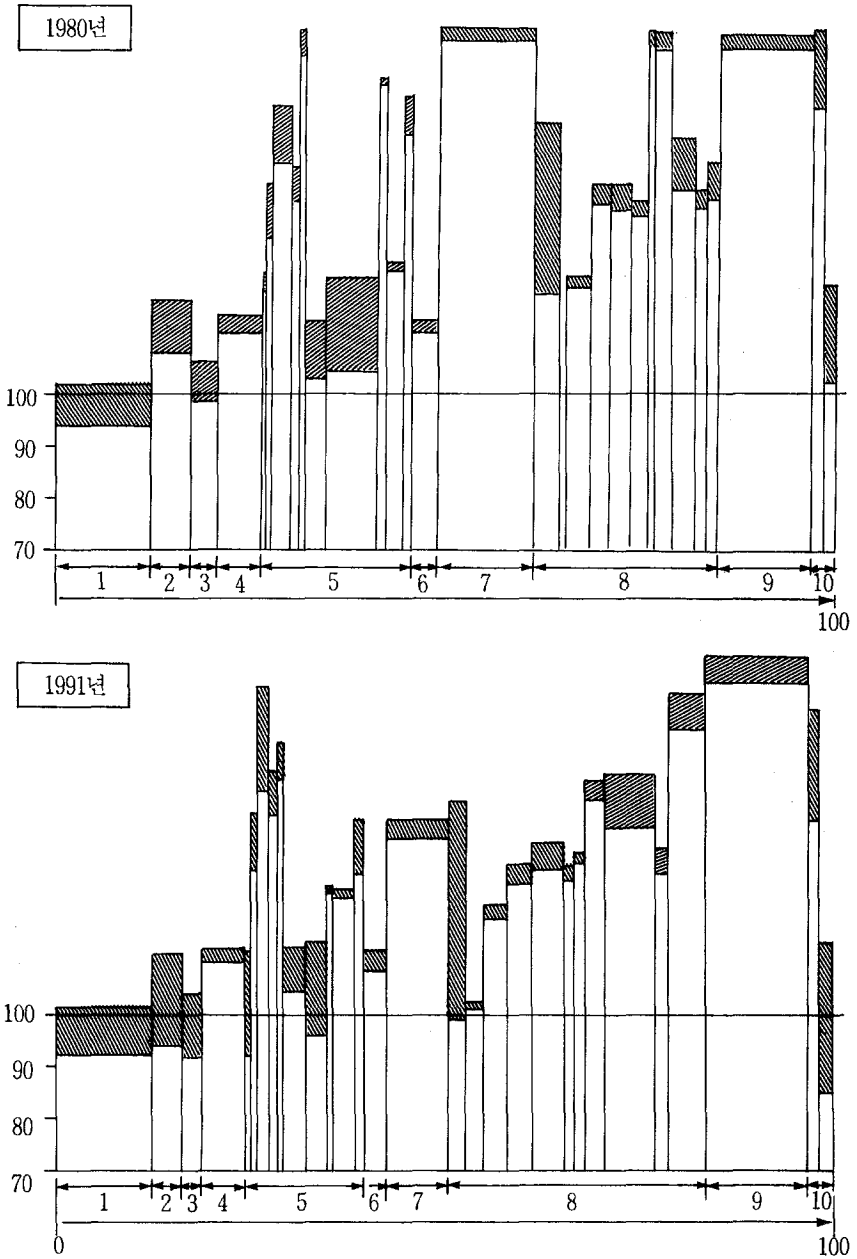
(%)

	실질자급도			변동분	
	1980	1985	1991	1980-85	1985-91
농림어업	76.36	80.64	82.93	4.28	2.29
광업	-597.27	-334.73	-279.11	262.54	55.62
제조업	125.55	130.29	119.09	4.74	-11.20
생필품	98.45	99.98	91.56	1.53	- 8.42
주요산업	128.56	126.86	116.60	- 1.70	-10.26
①음식료품	145.96	158.81	138.84	12.85	-19.97
②섬유·의복	94.45	97.38	91.77	2.93	- 5.61
③목재·가구	108.12	106.42	94.11	- 1.70	-12.31
④지류·인쇄	98.42	98.80	91.87	0.38	- 6.93
⑤화학비료	111.54	114.22	110.12	2.68	- 4.10
무기화학	120.25	101.08	92.13	-19.17	- 8.95
유기화학	129.45	130.34	127.57	0.89	- 2.77
합성섬유	143.80	146.63	143.24	2.83	- 3.39
타타리	137.92	147.87	139.02	9.95	- 8.85
석유제품	164.73	168.20	145.69	3.47	-22.51
탄화석	103.06	107.21	104.46	4.15	- 2.75
플라스틱	104.28	101.03	96.03	- 3.25	- 5.00
고무제품	159.93	149.22	123.47	-10.71	-25.75
⑥요업·토석	123.86	129.91	122.85	6.05	- 7.06
⑦철강제품	150.56	150.62	127.42	0.06	-23.20
비철금속	111.51	114.30	108.22	2.79	- 6.08
⑧금속제품	169.66	172.59	133.91	2.93	-38.68
기타기계	118.77	106.24	98.66	-12.53	- 7.58
⑨수송기계	109.40	106.36	101.22	- 3.04	- 5.14
⑩정밀기계	120.35	122.77	118.05	2.42	- 4.72
기타기계	136.36	134.37	125.09	- 1.99	- 9.28
특수기계	134.89	137.69	127.91	2.80	- 9.78
가전기기	133.90	134.57	125.77	0.67	- 8.80
음향·통신	179.20	179.92	129.30	0.72	-50.62
중전기	166.69	170.69	141.84	4.00	-28.85
기타전기	139.39	168.48	135.58	29.09	-32.90
수송기계	135.59	140.73	127.46	5.14	-13.27
정밀기계	137.54	152.90	154.81	15.36	1.91
기타제품	165.80	191.58	163.79	25.78	-27.79
건축	155.40	159.08	137.97	3.68	-21.11
의사	102.63	106.66	84.52	4.03	-22.14
건축	100.56	100.79	100.00	0.23	- 0.79
의사	113.49	113.91	109.56	0.42	- 4.35
소매	109.03	110.47	107.52	1.44	- 2.95
금융	113.98	113.81	108.56	- 0.17	- 5.25
부동산	102.86	103.30	102.86	0.44	- 0.44
운송	121.61	121.33	116.47	- 0.28	- 4.86
공인	103.78	104.92	105.24	1.14	0.32
개	102.18	101.98	100.54	- 0.20	- 1.44
전산	109.31	112.70	108.43	3.39	- 4.27

주 : 실질자급도의 계산방식은 본문 참조. 또한 산업분류는 1980년, 85년의 84개 통합부문과 91년의 100개 통합부문을 필자가 40개 부문으로 통합분류한 것임.

자료 : 總務廳統計局, 『産業連關表』, 東京, 各年판에 의거 필자 계산.

〈그림 3〉 스카이라인 분석에 의한 일본 제조업부문의 실질자급도 (%)



주 : 실질자급도는 분문을, 산업분류는 〈표 1〉을 참조.

자료 : 〈표 1〉과 같음.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일본산업의 실질자급율 추이가 <표 1>이며, 이 계산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스카이라인 맵이 <그림 3>이다.

<그림 3>은 일본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 산업을 40개 부문으로 통합분류한 분석결과 중 30개 부문의 제조업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막대그림의 횡축 폭은 제조업 전체의 생산유발총액에 대한 각 부문의 생산유발액 비율, 즉 산업별 산출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또 막대그림의 종축 길이는 내수와 수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발생산총액을 내수에 의한 생산유발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며, 따라서 종축의 100을 초과하는 부문은 수출비율의 크기가 된다. 한편 사선부문은 최종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비율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자급율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입부분을 뺀 것으로서 그림에서는 사선의 아랫부분, 즉 막대그림의 하얀 부분으로 표시되고 있다.

먼저 <그림 3>에서 80년도 일본의 제조업부문별 생산유발액비율을 막대그림의 횡축 폭의 크기로 개관하여 보면 ① 음식료품, ⑦ 철강, ⑨ 수송기계가 두드러지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세 개 산업에서의 그 비율은 각각 12%로서 80년 당시까지만 하여도 제조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② 섬유·의복, ④ 지류·펄프·인쇄, ⑤ 석유화학관련산업에서 차지하는 석유제품의 비중도 각각 6%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91년에는 생산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음식료품을 제외하면 ② 섬유·의복, ④ 지류·펄프·인쇄, ⑤ 석유제품, ⑦ 철강의 생산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⑧ 금속조립 및 기계제품과 ⑨ 수송기계는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양 시점간의 생산유발액비중을 비교하면 화학비료, 무기화학, 유기화학, 합성수지, 화학섬유, 기타화학, 석유제품, 석탄제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을 포함한 ⑤ 석유화학관련제품은 19.1%에서 15.0%로 4.0% 감소하였고, 철강과 비철금속은 19.1%에서 14.6%로 4.5%포인트의 감소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⑧ 일반기계와 전기·전자기계, ⑨ 수송기계, ⑩ 정밀기계를 포함한 기계제품은 30.2%에서 40.1%로 약 10%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80년대 일본의 산업생산구조가 전반적으로 기초소재 산업에서 기계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공조립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엔고에 의한 비교우위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그림의 실질자급도 크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림에 의하면 80년도 일본의 실질자급율은 ① 음식료품과 ③ 목재·가구를 제외하면 모든 제조업부문에서 10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제조업 평균실질자급율은 125.6%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평균치보다 높은 실질자급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산업은 사무기기 179%, 철강 170%, 가전기기 167%, 수송기계 166%, 화학섬유 165%, 석탄제품 160%, 정밀

기계 155%, 고무제품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기화학, 일반기계, 특수기계, 전기·전자기계에서도 평균치를 상회하는 높은 자급율을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85년간 실질자급율이 하락한 산업은 섬유·의복, 화학비료, 석유제품, 석탄제품, 비철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 7개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섬유·의복을 제외하면 이들 산업의 실질자급율은 85년 당시까지만 하여도 100%를 상회하였다. 더구나 그 외의 산업에서는 자급율 그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일본은 85년 당시만 하여도 섬유·의복, 가전기기 등의 최종소비재 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금속 등의 기초소재 및 중간재산업, 그리고 일반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계 등의 자본재산업 등 모든 제조업부문에서 완벽한 자급체제를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전 산업에서 높은 수출여력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구조는 선진세계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형태로서 소위 일괄자급형 생산체제라 한다.

이러한 일괄자급형 생산체제는 수입대체기인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정부의 다양한 산업육성 및 조정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정을 통하여 고도성장기인 60년대 중반에 구축되었으며, 20여년간 이러한 구조에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제조업 평균실질자급도의 추이를 계산하면 75년 125.2%, 80년 125.6%, 85년 130.3%로써 완벽한 자급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수출여력을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85년 이후 이러한 생산체제는 붕괴하기 시작하여, 91년 제조업 평균실질자급율은 119.1%로 크게 저하하였다.

같은 그림에서 91년의 스카이라인도를 개관하면, 80년에 비하여 실질자급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생산구조가 기계관련부문으로 크게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91년간 실질자급율이 크게 저하한 산업은 사무기기, 철강, 음향·통신기기, 가전기기, 수송기계, 석탄제품, 고무제품, 화학섬유, 잡제품, 정밀기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잡제품을 제외하면, 이러한 산업들은 제조업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실질자급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질자급율이 100% 이하인 산업은 80과 85년 공히 음식료품과 목재·가구에 불과했으나 91년에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가구, 화학비료, 석유제품, 비철금속, 기타제품 등 7개 산업으로 증가하였다. 자급율 100% 이하 산업의 생산유발액비중은 80년 15.6%에서 91년 25.8%로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생산체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7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엔화의 평가절상과 임금상승이 급속도로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NIEs의 '추적'에 의하여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복, 목재·

가구, 잡제품 등의 산업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부문의 제품수입이 아시아 NIEs로부터 급증한 한편,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수출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실질자급율은 저하하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부문에 실질자급율이 저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기업은 꾸준한 감량경영의 추진과정에서 급속한 기술혁신을 실현함으로써 85년까지 실질자급율 100% 이상을 항상 유지하였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특정산업부문의 실질자급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85년 이후라는 것이다.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의 평가절상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일본의 대외구매력과 해외투자여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더욱이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무역마찰은 더욱 격화되었다. 따라서 85년 이후 일본은 강한 엔화의 대외구매력을 배경으로 하여 수출주종품목의 해외현지 생산을 위한 직접투자가 거의 모든 제조업부문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거점의 현지화를 통하여 최종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내생산은 감소하는 한편, 수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실질자급율은 100% 이하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관찰기간 동안 철강산업의 실질자급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전기기기관련산업의 자급율이 크게 신장된 것은, 산업의 첨단화를 불러 일으킨 반도체가 지금까지 중요한 투입재로 사용되었던 철강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노동집약적 생활관련부문과 자원 및 자본집약적 기초소재산업의 실질자급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기술집약적 가공조립산업에서의 실질자급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공조립부문을 제외한 다른 몇 개의 산업에서는 수출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산업구조가 엔고를 계기로 하여 기술집약적 첨단가공조립산업 쪽으로 조정되면서 지금까지 20여년 이상 견지되어온 수입저지적이고 수출의존적인 일괄자급형 생산체제가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 '시간단축' 중심의 고용조정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에 의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일괄자급형 생산체제의 붕괴는 개별기업에서의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경영전략 하에서 급속도로 추진된 해외 직접투자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자원확보형과 저임금노동이용형 투자로서 자원 및 노동풍부국인 아시아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직접투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지향형 직접투자와 '코스트' 추구형 직접투자로 전개되었다.

시장지향형 직접투자는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미나 EC제국으로 진

출하는 것으로서, 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기기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현지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코스트' 추구형 직접투자는 엔고의 결과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글로벌한 시점에서 생산과 판매의 체제를 재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공정간의 분업을 행함과 동시에 일본으로의 부품공급(역수입)을 위한 해외투자도 포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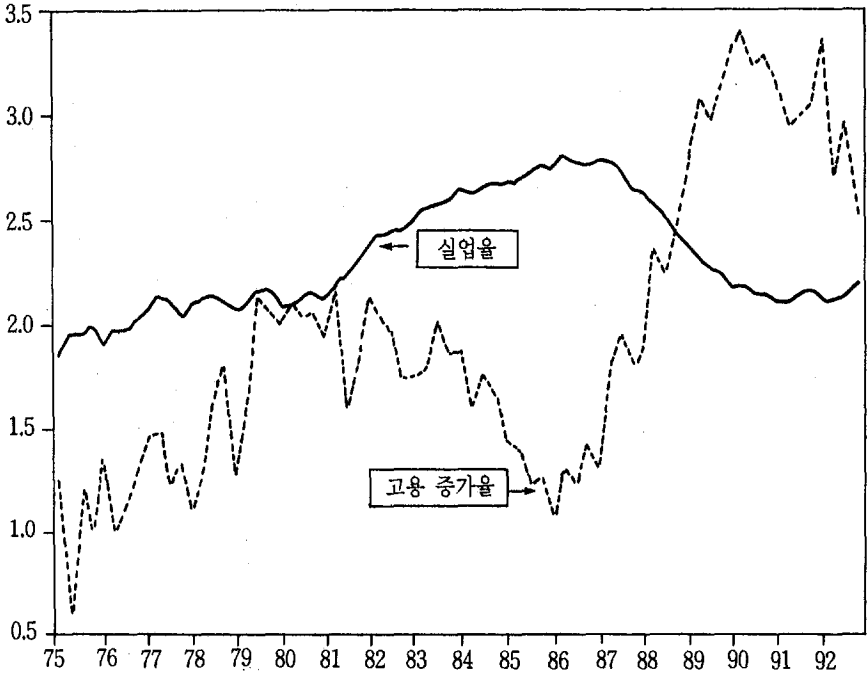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85년 이후 엔고과정에서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51-92년간 누계액으로 3,861억불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78.4%에 해당하는 3,028억엔이 86-92간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열위에 놓여 있는 제조업부문의 상당수가 특히 아시아지역으로 대거 생산거점을 이전시켰고, 따라서 일본국내에서는 산업공동화현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86년 11월 이후 경제가 호전되면서 확대국면으로 전환하였고, 엔고합리화에 의한 고용조정에도 동요되었던 노동시장은 급속하게 호전되었다.

노동력의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75년 이후 1 이하로 크게 떨어진 후 86년까지 평균 0.64에 머물고 있었다. 이것은 고용증가율과 실업율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림 4>에 의하면, 고용증가율은 75년 평균 1.0%에서 80년 평균 2.1%까지 증가한 후 86년 1/4분기에 1.1%로 크게 저하하였다. 연평균고용지수를 이용하여 이 기간의 고용증가율을 계산하면 75-80년 평균 0.92%, 81-86년 0.96%로 나타난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노동력인구증가율 1.1%, 1.2%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업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전반 고용증가율의 급속한 저하를 반영하여 완전고용상태에 있던 일본의 실업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고용저조, 실업증가라는 일련의 현상은 기술한 바와 같은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비용 절감을 위하여 고용량을 최대한 억제하여왔다는 데 주요원인이 있다. 실제로 71-80년까지 제조업부문의 고용지수 변화율은 연평균 -1.1%였으며, 81-85년에도 0.8%에 불과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불황을 탈피하면서 고용시정은 크게 호전되었다.

86년까지 0.64 정도에 머물고 있던 유효구인배율은 87년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87-92년 평균 유효구인배율이 1.23을 기록함으로써 구직자수에 비하여 구인수가 23%나 높게 나타나 노동력의 공급부족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을 반영하여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증가율은 86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89년 1/4분기에

6) 日本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報』, 東京, 各年판에 의거 추계.

〈그림 4〉 고용증가율 및 실업율의 추이 (계절조정 3년이동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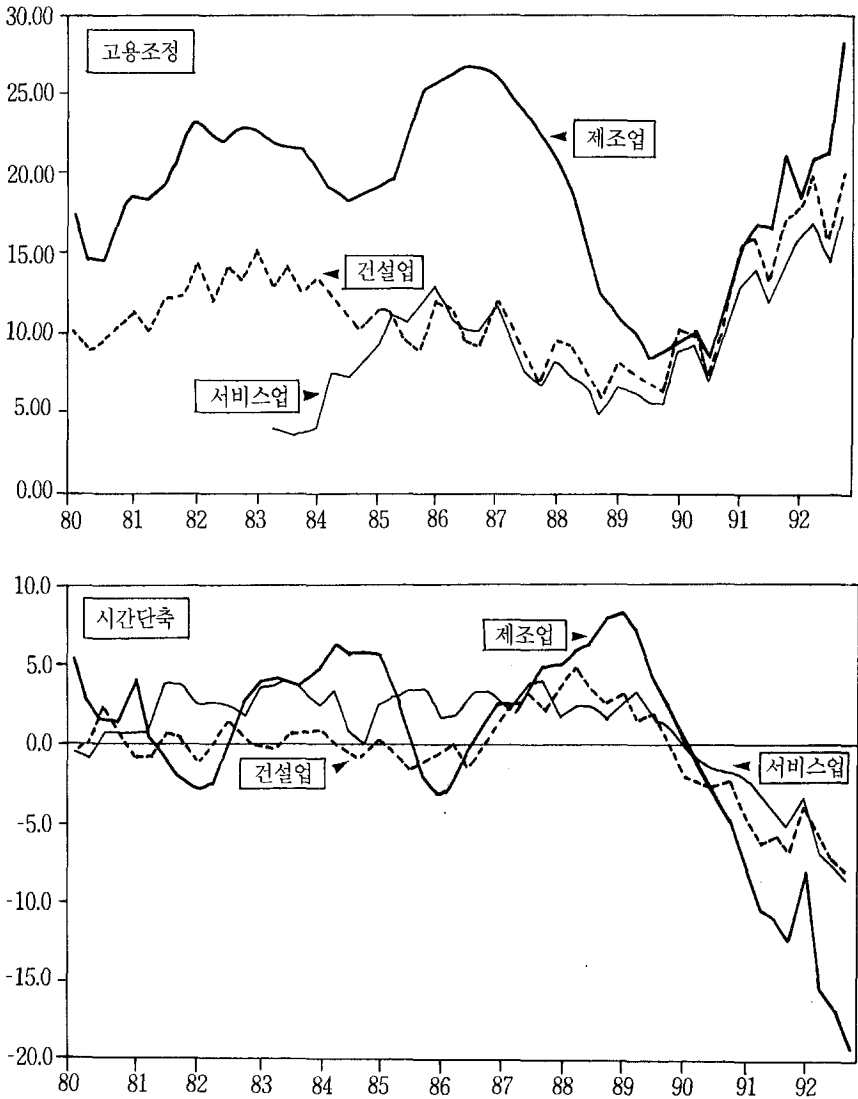
자료: 總務廳統計局, 『勞動力調査』, 東京, 各年판 및 勞働省, 『毎月勞働統計調査』, 東京, 各年판에 의거 작성.

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최고치인 3.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92년에도 3.0%가까운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엔고 이전기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고용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반영하여 실업율은 87년 이후 급속하게 저하하였고, 91년 이후 실업율은 2.1%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엔고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촉진이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고용증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 기간에 고용이 오히려 크게 촉진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급속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더우기 신규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개별기업과 산업에서 근로시간(잔업시간)단축에 의한 고용조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에 의하면, 일본의 산업은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고용조정을 신속하게 단행

〈그림 5〉 고용조정비율과 시간단축변화율의 추이 (계절조정 3년이동 평균, %)



주 : 고용조정비율은 조사대상 사업소 중에서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소의 비율을 나타내며, 시간단축은 산업별 평균잔업시간의 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 勞働省, 『労働經濟動向調査』, 東京, 各年판 및 勞働省, 『毎月労働統計調査』, 東京, 各年판에 의거 작성.

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부문의 경우 80년 이후 대폭적 고용조정이 세 번에 걸쳐 단행되었다. 첫번째는 81-82년이다. 이 기간에 고용조정을 단행한 사업소의 제조업 전체사업소에 대한 비율인 고용조정율은 81년 18.7%에서 83년 평균 22.0%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의 제조업 평균잔업노동시간은 연평균 -3.0% 단축되었다. 그 후 84년초까지 경기회복에 대응하여 고용조정율은 저하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은 연평균 7.7% 증가했다. 두번째는 엔고조정기인 85년 초부터이다. 고용조정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87년 평균 25%에 달하였다. 이 기간에 노동시간은 연평균 -6.6%씩 단축되었다. 그리고 87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내수확대에 힘입어 활황을 보이면서 고용조정율은 급속하게 저하하였다. 세번째는 90년 하반기부터이다. 버블경제의 진정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92년말까지 고용조정율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92년 29.0%에 달하였다. 내수확대에 의한 호황기인 87년 4/4분기부터 89년 2/4분기까지 제조업 평균잔업노동시간이 연평균 11.5% 증가한 반면, 버블경제가 붕괴한 89년 3/4분기부터 92년 말까지 잔업노동시간이 연평균 -9.8%로 단축됨으로써 고용조정은 사상 최고수준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이 수반한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개별기업의 고용조정은 종신고용제라는 일본적 고용관행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상시고용자의 해고에 의한 감원보다는 중도채용의 삭감, 정년퇴직에 따른 충원정지, 잔업규제, 일시휴업, 배치전환이나 하청협력업체로의 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잔업시간의 단축에 의한 고용조정이 가장 대표적이다.⁷⁾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기적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잔업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기고용자수를 감원하거나 정시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기업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 비용부담의 내용은 노동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따른 직접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기고용자에 대하여 지불한 교육훈련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감원 등에 의한 고용조정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나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점, 나아가 호황기에 적정노동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氏原正治郎, 1989:124).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단기적 고용조정은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잔업시간 단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황시에 상시고용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규고용을 늘려나가는 것은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정책적 지원조치와 노사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대두한다.

7) 經濟企劃廳, 『平成5年度 經濟白書』, 東京, 大藏省, 1993:54.

3. 고용조정지원과 노사협조

일본정부는 74년 실업의 예방과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고, 75년에는 「고용조정급부금 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그리고 77년에는 기술한 특리법이 제정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실업을 억제하는 한편 고용기회의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고용조정급부금제도는 고용조정 및 고용촉진을 실시한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로서 대부분 제조업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활동의 축소로 인한 노동자의 일시휴직, 사업전환·배치전환을 위한 노동자의 교육훈련, 협력업체로의 전보 등에 따른 일련의 고용조정비용 등이 보조되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연령자고용안정 보조금도 지불되고 있다(氏原正治郎, 1989: 121-130). 이 제도는 8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이나 조건을 완화하였고, 근년에는 서비스업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조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86-91년간 1,094억엔이 지불되었으며, 93년에도 509억엔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80년대 후반 고용조정보조금의 업종별 지급상황을 보면 기계관련업종이 54.7%, 소재관련업종이 32.8%,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1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이러한 고용조정보조금은 임금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업은 그만큼 비용부담이 절감되어 기업체산성의 악화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단축이나 배치전환과 같은 고용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한편, 기존고용량의 유지 및 신규고용창출의 확대가 원만하여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노사협조는 일본의 고용조정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라는 고용관행 하에서 상호협조적 체제를 유지하여왔으며, 특히 구조조정기에 노조측의 협조적 자세는 일본산업의 합리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숙련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던 2차대전 이전기에 대기업 정규사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종신고용제는 노사양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즉 경영자로서는 신입사원의 채용에서 엄격한 선발에 의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 ‘생애일사’(生涯一社)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근로의욕을 가진 애사심이 강한 종업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종업원으로서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동조건이 주어지고, 실업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구나 대기업에서 안정

8) Ibid:41.

된 상태로 근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松本正徳, 1993: 104).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 노사양측은 구조조정기에도 종신고용제를 최소한 유지하는 선에서 합리화에 대처하여왔던 것이다.

특히 70년대 초 노사협의제를 도입하면서 노조측은 생산성향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노사협의제는 고용조건의 결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대표와 사용자가 기업경영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협의제에 의한 구사노력이 전개되더라도 노사양측은 종신고용제라는 일본적 고용관행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이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합리화에 대한 노조측의 반발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 협의제의 도입으로 70년대 초 이후 일본산업은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비롯한 공장자동화(FA), 사무자동화(OA)에 의한 감량경영을 노사간에 마찰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松本正徳, 1993:111-139).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협조는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시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노동운동에 일대변혁이 일어났다. 86년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에 관한 「마에가와 리포트」가 발표된 후 87년 11월 노동운동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던 보수우익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도우메이'(同盟), '주우리스 로우렌'(中立勞連), '신산베쓰'(新産別)가 해체됨과 동시에 이 세 개의 노조를 통합한 형태로 '전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連合)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렌고우'(連合)는 발족하면서 다음과 같은 운동 방침을 제시하였다. "고용의 확보와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조를 중시하면서, 경제·산업의 기반을 정비·강화하고, 아울러 원활한 산업조정을 추진하며, 활력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에 참여한다."(高内俊—外編, 1988: 208) 이러한 운동방침은 새로 발족한 일본의 노동단체가 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난국을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대처해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우익노동단체의 움직임은 일본노동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89년 11월 막강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던 좌익노동단체 '소우효우'(總評,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해산을 야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70년대 전반까지만 하여도 매년 평균 7-8,000건에 달하던 노동쟁의 건수는 급속하게 줄어들어 86-92년간에는 평균 1,700여 건을 기록하게 되었다. 더구나 동맹파업 건수도 70-85년간 연평균 1,346건에 달하던 것이 86-92년간 399건으로 1/3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70년대까지만 하여도 연평균 9%에 달하던 「슌도우(春闘)」에 의한 임금인상 결정율도 81-85년간 평균 5.9%, 86-92년간 평균 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노사는 매우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노동자단체가 구조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는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급변에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특히 노조 단체행동의 강도를 크게 약화시켰다. 노동자단체의 교섭력 약화는 파견노동제의 광범위한 도입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노동자파견제는 파트타임 노동제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파트타임 노동제에서는 특정기업이 다른 일반노동자와 동일하게 파트타임을 직접 고용함과 동시에 전적인 지휘명령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파견노동제에서는 파견회사와 체결되는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라는 사용자 권한의 일부가 파견회사의 사업주에게도 주어진다. 따라서 파견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섭력은 자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기업은 일시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했을 때 파견노동을 고용하는 경향이 강하다(三輪芳郎編, 1992:262-289).

파견노동제는 70년대 초 석유위기가 수반한 고용불안기에 도입되었고, 86년 노동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노동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파트타임과 파견노동자 중심의 주당 35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비율을 계산하면, 제조업부분의 경우 70년 10.7에서 80년 17.1%, 85년 18.6%를 거쳐 92년에는 25.9%를 기록하고 있다. 근년 제조업고용의 1/4은 파트타임과 파견노동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기계약에 의거하기 때문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율이 크게 저하하고 그 교섭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노·사·정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이 수반한 고용조정을 '지탄'(時短)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추진하면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에 노력하여왔던 것이다.

IV. 고용구조의 변화와 서비스화의 진전

1. 취업구조의 변화

〈표 2〉는 1970-92년까지의 산업별취업자 증가율과 취업구성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전 기간을 통하여 농림어업과 광공업에서 빠른 속도로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그 비중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비중이 높았던 농림어업부분의 취업증가율은 전기간 연평균 -2.9%였다. 이같이 높은 취업감소율을 반영하여 취업구성비는 70년 21.2%에서 80년 14.1%를 거쳐 92년에는 9.1%로 12%나 감

소하였다.

제조업부문을 보면, 70년대에 기술한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의 여파로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불황산업의 감량경영이라는 구조조정의 결과 취업증가율이 연평균 -0.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는 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 부문의 취업증가율은 연평균 1.0%를 유지하여왔다. 이를 반영하여 취업구성비도 70년의 28.7%에서 80년의 26.3%를 거쳐 92년에는 25.6%로 3.1% 감소하였다.

한편 3차산업에서는 도소매업과 운수통신업을 예외로 하면 취업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취업증가율은 높은 율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70년대 중반 이후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취업비중은 10%와 19% 전후 수준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92년에는 전 산업취업자 중에서 24.0%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증대는 제3절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산업구조가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속도로 서비스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70년대 이후 구조조정의 주요대상이었던 제조업에 주목하면, 기간별 취업증가율이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취업증가율은 섬유·의복업에서 전 기간을 통하여, 또 금속제품업에서 85년까지 각각 마이너스값을 기록함으로써, 이 기간에 이 두 업종에서의 감량경영에 의한 구조조정이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결과 취업구성비는 섬유·의복업이 70년 12.2%에서 92년에는 7.0%로, 또 금속제품은 8.5%에서 7.5%로 각각 감소하였다. 또 종이·펄프업에서는 70년대 후반 절대적 감소를 기록하면서도 전 기간을 통하여 고용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을 보여 취업구성비는 계속적으로 저하하였다. 석유·석탄업과 요업·토석업에서는 전자에서는 80-92년까지, 후자에서는 75-85년경까지 취업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취업구성비가 감소하였다. 일차금속업은 80년대 중반 비교적 높은 취업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전반적으로 취업자는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계의 경우 70년대에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80년대에는 제조업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기계업에서는 70년대 전반에 취업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 매우 높은 취업증가율을 기록하여, 취업구성비는 70년의 10.8%에서 92년 16.1%로 5.3%나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제조업부문 고용의 구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섬유·의복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생활관련산업은 특히 70년대 전반에 대폭적 감량경영을 실시한 후 고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이 부문의 취업구성비는 70년 42.8%에서 80년 41.5%를 거쳐 92년 39.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종이펄프·석유화학·철강을 포함한 기초소재산업은 제1

(표 2)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및 취업구성비의 추이

(%)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 취업 구성비								
	71-75	76-80	81-85	86-92	1970	1975	1980	1985	1992
농 립 어 업	-4.3	-2.6	-2.7	-2.1	21.2	16.8	14.1	11.8	9.1
광 업	-7.3	-2.4	-4.3	-2.5	0.5	0.3	0.3	0.2	0.2
제 조 업	-0.4	-0.2	1.0	1.1	28.7	27.6	26.3	26.5	25.6
음 식 료 품									
섬유·의복	-0.7	1.1	2.7	0.7	9.4	9.2	9.8	10.6	10.3
종이·펄프	-4.6	-2.5	-0.3	-1.1	12.2	9.8	8.7	8.1	7.0
화 학	-1.1	-0.6	0.0	2.0	2.5	2.4	2.3	2.2	2.4
석유·석탄	0.4	-3.3	0.0	0.6	3.9	4.0	3.4	3.2	3.1
요업·토석	0.5	3.8	-6.2	-2.9	0.4	0.4	0.5	0.3	0.3
일차금속	1.8	-1.3	-2.4	0.0	4.8	5.3	5.0	4.1	3.8
금속제품	0.0	-2.4	2.6	-0.2	4.6	4.7	4.2	4.5	4.1
일반기계	-0.6	-0.4	-1.9	1.7	8.5	8.5	8.3	7.2	7.5
전기기계	-0.2	-0.5	1.5	2.0	10.7	10.8	10.6	10.8	11.5
전기기계	-1.2	2.1	6.7	2.1	10.8	10.4	11.5	15.1	16.1
수송기계	1.9	0.3	0.1	1.2	8.8	9.9	10.1	9.7	9.7
정밀기계	0.2	2.4	-1.1	0.5	2.2	2.3	2.6	2.3	2.2
기타제조업	0.7	0.4	-0.1	1.3	21.2	22.4	23.0	21.8	22.1
(생활관련)	-1.0	-0.1	0.5	0.7	42.8	41.4	41.5	40.5	39.3
(기초소재)	0.4	-1.9	-0.2	0.3	16.1	16.8	15.4	14.5	13.7
(조립가공)	0.0	0.5	1.9	1.7	41.1	41.8	43.1	45.0	47.0
건 설 업	3.6	2.3	-1.5	2.3	8.8	10.3	11.0	9.8	10.3
공 익 사 업	2.7	1.2	0.6	1.2	0.6	0.6	0.6	0.6	0.6
도 소 매 업	2.0	1.6	1.1	1.1	17.3	18.8	19.5	19.7	19.0
금 용 보 험	3.0	3.0	2.0	2.4	2.6	3.0	3.3	3.5	3.7
부 동 산	5.8	5.5	4.0	2.7	0.7	0.9	1.1	1.3	1.4
운 수 통 신	1.7	0.4	0.3	1.7	5.9	6.3	6.2	6.0	6.1
서 비 스 업	2.7	3.6	3.9	4.0	13.7	15.4	17.6	20.4	24.0
전 산 업	0.1	0.5	0.9	1.4	100	100	100	100	100

주: 제조업부문의 '생활관련산업'에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기타제조업이 포함됨. '기초소재산업'에는 종이·펄프, 화학, 석유·석탄, 요업·토석, 일차금속이 포함됨. '조립가공산업'에는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가 포함됨. 제조업 부문별 취업구성비는 제조업 총취업자수에 대한 각 부문의 비율임.

자료: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東京, 各年판에 의거 계산.

차 석유파동 이후부터 제2차 석유파동 이후인 85년 경까지 인원감축에 의한 감량경영을 실시하였고 85년 이후에도 고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였다. 그 결과 취업구성비는 70년 16.1%에서 80년 15.4%를 거쳐 92년 13.7%로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기계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조립가공산업에서는 70년대에 고용이 크게 억제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술집약적인 새로운 첨단부문의 확대로 높은 취업증가율이 나타났다. 이 부문의 취업구성비는 70년 41.1%에서 80년 43.1%를 거쳐 92년 47.0%로 5.2%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70년대 이후 제조업고용의 중심은 기계관련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립가공산업으로 전환되어왔으며, 이것은 이 부문의 높은 취업증가기여율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실제로 80-92년간 제조업부문 취업자의 증가수는 188만명에 달하였으나, 이 중에서 76.1%에 해당하는 143만명이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한 조립가공산업에서 흡수되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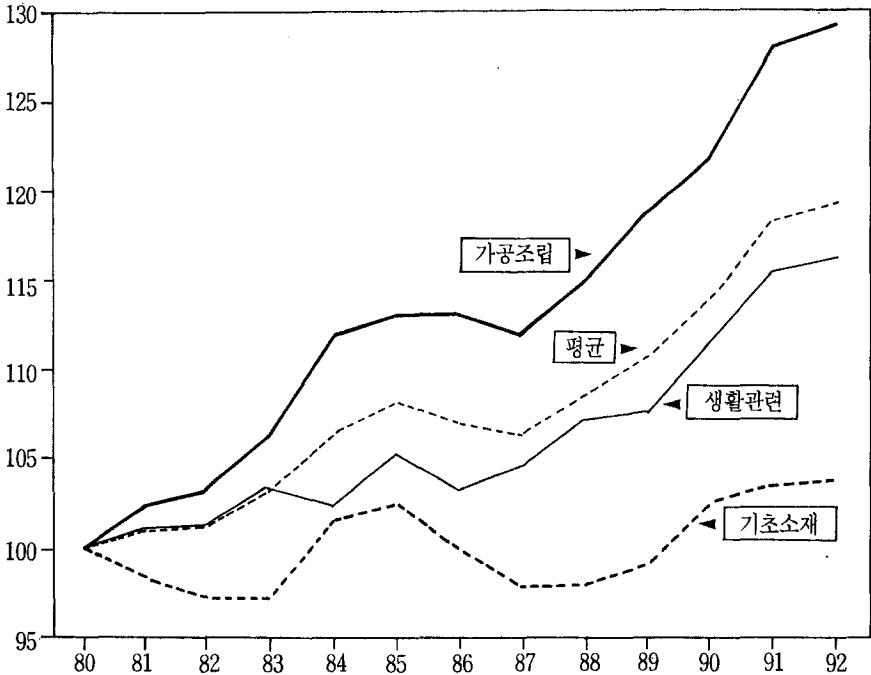
2. 제조업의 고용증가 요인

〈그림 6〉은 80년 이후 제조업부문의 상시고용자를 기준으로 측정된 고용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가공조립산업의 고용지수는 8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파동기인 86-87년간 정체적으로 추이한 다음,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임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에는 내수주도형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활관련산업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공조립산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80-85년간 가공조립산업의 고용증가율은 13.0%인데 비하여 생활관련산업은 5.0%에 불과했다. 또한 87-92년간 전자가 15.2%였는데 비하여 후자는 10.5%였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율의 차이에 의하여 가공조립산업과 생활관련산업간에는 84년부터 괴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기초소재산업의 고용지수는 80년대 중반과 90년 이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 부문의 고용증가율은 80년과 92년의 양시점간에 4%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80년대 제조업부문의 고용증가는 가공조립부문에 의하여 주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엔고에 의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6년을 기점으로 제조업부문별 연평균 고용증가율을 나타낸 것이 〈그림 7〉이다. 여기에 의하면, 80-86년까지의 고용증가율은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87-92년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80-87년간 고용이 감소한 산업은 석유·석탄(-5.8%), 요업·토석(-2.1%), 정밀기계(-1.0%), 금속제품(-0.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 수송기계, 섬유, 종이, 기타 제조업에서는 고용증가율이 극히 미미

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식품류(1.5%), 일차금속(1.7%), 일반기계(1.8%)산업에서는 제조업평균(1.1%)을 크게 상회하는 고용증가율이 나타났고 특히 전기·전자기계산업의 고용증가율은 무려 5.9%에 달하고 있다. 80-86년까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산업의 고용감소와 조립가공산업의 고용증가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6〉 제조업부문 고용지수의 추이 (198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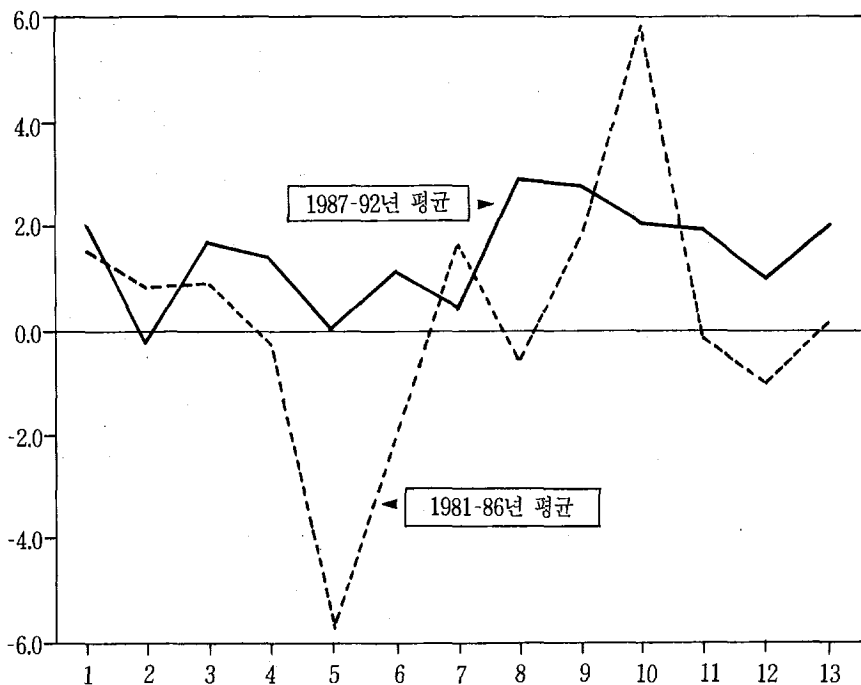


주 : 고용지수는 상시고용자 기준에 의한 것임.

자료 :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東京, 各年판에 의거 작성.

이와 대조적으로 87-92년에는 급속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 감소하거나 정체적으로 추이한 부문은 섬유류(-0.3%), 석유·석탄(0.0%), 일차금속(0.5%) 등이다. 또한 제조업평균(1.9%)를 상회하는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식료품(2.0%), 금속제품(2.9%), 일반기계(2.8%), 전기기계(2.1%), 수송기계(2.0%), 기타 제조업(2.0%) 등이다. 종이류, 화학, 정밀기계 등의 산업도 86년 이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추진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한 바와 같은 내수주도

<그림 7> 제조업 부문별 고용증가율의 추이 (연평균, %)



주 : 고용증가율은 상시고용자 기준에 의한 것임. 산업분류는 이하와 같음. 1. 음·식료품, 2. 섬유·의복, 3. 종이·펄프, 4. 화학, 5. 석유·석탄, 6. 요업·토석, 7. 일차금속, 8. 금속제품, 9. 일반기계, 10. 전기·전자기계, 11. 수송기계, 12. 정밀기계, 12. 기타 제조업
 자료 :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東京, 各年판에 의거 작성.

에 의한 높은 경제성장과 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의 결과 제조업부문의 고용은 기계관련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은 <그림 7>의 기간별 고용증가율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실현되었는가를 계산하여본 것이다. 이 요인분석은 ‘고하마·우라다’(Kohama & Urata, 1988)가 사용하였던 고용변화의 요인분석모델을 원용하였다. 즉 고용량(L)은 생산(X), 국내수요(D), 수출(E), 수입(M), 노동생산성(P)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를 증가율로 나타내면, 다음의 ①, ② 정의식으로부터 요인분해는 ③식과 같이 된다.

$$X = D + E - M \dots\dots\dots ①$$

$$P = X/L \dots\dots\dots ②$$

$$\frac{\dot{L}}{L} = \frac{\dot{D}}{D} \cdot \frac{D}{X} + \frac{\dot{E}}{E} \cdot \frac{E}{X} - \frac{\dot{M}}{M} \cdot \frac{M}{X} - \frac{\dot{P}}{P} \dots\dots\dots ③$$

여기에서 ③식은 제조업고용이 제조업 총생산액으로 가중된 내수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크기에 의하여 증가하는 반면, 수입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크기에 의하여 감소한다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가 <표 3>이며, 이것을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⁹⁾ 그림에 의하면, 먼저 81-86년간 고용증가율과 그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별 막대그림의 크기가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87-92년간에는 그 기복이 완만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고용증가의 요인별 구성을 보면 80년대 중반까지는 음식료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에서 내수증가에 의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계관련산업 수출증가에 의한 기여도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입증가에 의한 고용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석탄산업과 정밀산업에서는 실질수입액 감소로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는 음식료품과 기계관련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차금속, 섬유·의복, 종이펄프 등의 산업에서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의 감소로 고용증가에 플러스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87-92년간에는 모든 산업에서 내수증가에 의한 고용증가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중반까지에 비하여 수출증가에 의한 기여도는 대폭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더구나 모든 산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증가에 의한 감소효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의 고용증가요인을 종합하면, 80년대 중반까지는 내수와 수출의 증가에 의하여 또는 부문에 따라서는 노동생산성의 감소나 수입의 감소에 의하여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증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에 수반된 구조조정기에는 노동생산성과 수입의 현저한 증가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높은 내수증가에 의하여 대부분 상쇄되었다. 그리고 수출증가에 의한 고용증가효과는 플러스값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그 기여도의 크기는 전기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9) 이 분석에서는 고용자 이외의 모든 통계자료를 1985년 불변가격으로 실질화하였다. 그러나 수출입에 관한 물가지수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인별 기여율의 합계가 실제고용증가율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 3〉 제조업 부문별 고용증가의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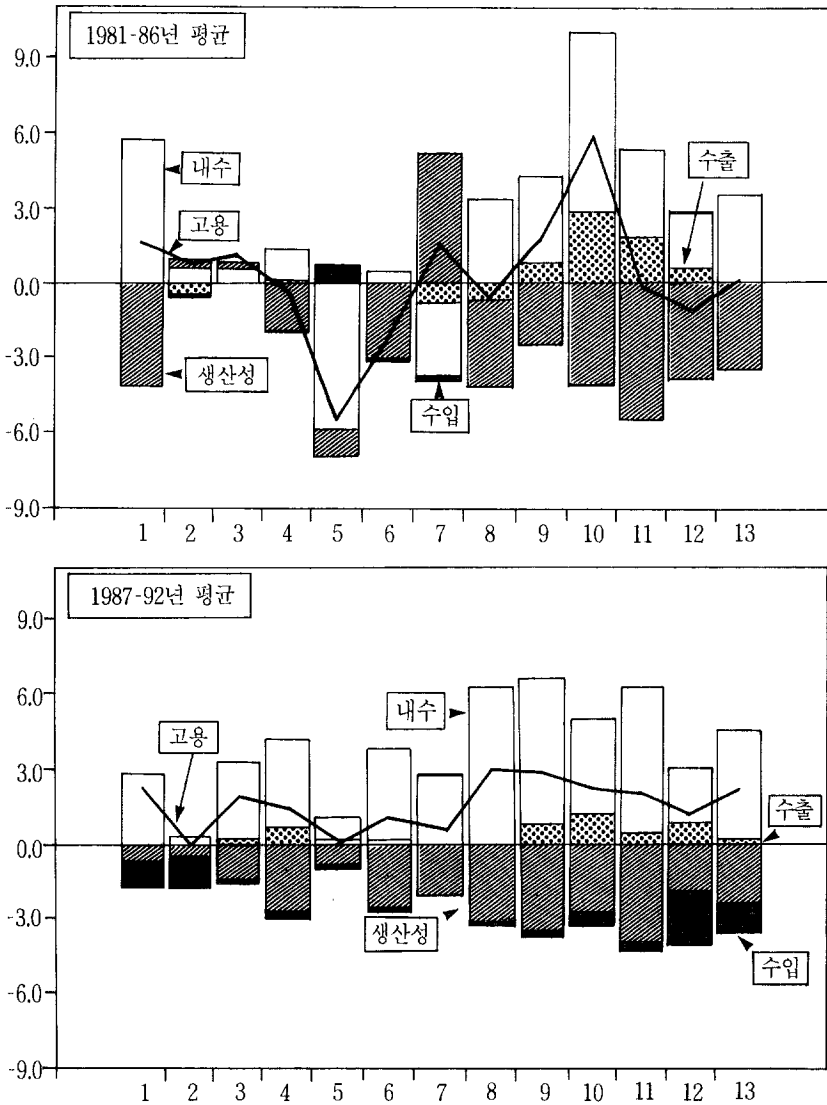
(%)

	고용 증가율	고용증가 기여율				
		국내수요	수출	수입	생산성	오차
[1980-86년]						
제조업 합계						
식료품	1.12	2.19	0.48	-0.03	-1.46	-0.06
섬유류	1.49	5.76	-0.06	0.09	-4.16	-0.14
종이류	0.82	0.65	-0.40	-0.27	0.32	0.52
화학	0.90	0.55	0.00	0.08	0.26	-0.00
석유·석탄	-0.29	1.30	0.12	-0.18	-1.91	0.38
요업·토석	-5.75	-5.89	-0.03	0.77	-1.10	0.50
일차금속	-2.08	0.53	-0.08	-0.20	-3.00	0.67
금속제품	1.73	-2.94	-0.75	-0.37	5.29	0.50
일반기계	-0.60	3.40	-0.64	0.01	-3.60	0.23
전기기계	1.77	3.47	0.83	0.03	-2.43	-0.13
수송기계	5.85	7.21	2.88	-0.19	-4.02	-0.03
정밀기계	-0.11	3.53	1.88	-0.11	-5.44	0.04
기타	-1.01	2.24	0.65	0.13	-3.83	-0.20
	0.12	3.48	0.07	-0.06	-3.41	0.05
[1987-92년]						
제조업 합계						
식료품	1.87	3.88	0.39	-0.54	-2.31	0.46
섬유류	2.02	2.77	0.01	-1.14	-0.75	1.14
종이류	-0.29	0.24	0.04	-1.40	-0.55	1.38
화학	1.74	3.13	0.16	-0.19	-1.51	0.15
석유·석탄	1.38	3.58	0.61	-0.42	-2.77	0.38
요업·토석	0.03	0.94	0.12	-0.21	-0.91	0.09
일차금속	1.13	3.70	0.12	-0.21	-2.63	0.15
금속제품	0.46	2.70	-0.16	0.13	-2.03	-0.18
일반기계	2.91	6.27	0.01	-0.24	-3.18	0.05
전기기계	2.82	5.80	0.82	-0.33	-3.60	0.13
수송기계	2.06	3.80	1.21	-0.62	-2.81	0.49
정밀기계	1.97	5.82	0.47	-0.43	-4.00	0.12
기타	1.01	2.20	0.87	-2.24	-1.99	2.17
	2.01	4.38	0.17	-1.30	-2.48	1.24

주: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상시고용자 기준임. 생산성은 노동생산성증가율의 기여율을 나타냄.

자료: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各年刊, 東京에 의거 계산.

<그림 8> 제조업 부문별 고용증가 요인 (연평균, %)



주 : 고용증가율은 상시고용자 기준에 의한 것이며, 생산성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기여율을 나타냄
 산업분류는 이하와 같음. 1. 음·식료품, 2. 섬유·의복, 3. 종이·펄프, 4. 화학, 5. 석유·석탄
 6. 요업·토석, 7. 일차금속, 8. 금속제품, 9. 일반기계, 10. 전기·전자기계, 11. 수송기계, 12. 정
 밀기계, 13. 기타 제조업
 자료 : <표 3>에 의거 작성.

일본제조업부문의 고용증가요인 분석에서 얻어진 잠정적 결론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제품수입에 의한 고용감소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효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 장에서 분석하였던 바와 같이 85년 중반까지 수입저지적 일괄자급형 생산체제가 엔고에 수반한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제품수입이 증가하고, 이것이 산업의 실질자급도를 크게 저하시키면서 자급적 생산체제를 붕괴시켜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일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구조의 서비스화는 급속도로 촉진되어왔다. <표 4>는 5년 간격으로 발행되는 『사업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산업별 종업자수를 3차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류한 것이다.¹⁰⁾

여기에 의하면, 우선 물질 생산부문에서는 기술했던 바와 같이 가공조립산업을 중심으로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후반에 고용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3차산업 중에서 취업비중이 큰 ‘유통네트워크’ 부문의 취업구성비는 전 기간을 통하여 27.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도소매업의 고용증가율은 80년대 전·후반에 3차산업 전체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금융보험업에서는 특히 80년대 후반에 1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후자의 고용구성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사회공공서비스부문도 80년대 후반 운수·통신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으나, 그 증가율이 3차산업 평균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 구성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비스부문은 전산업 평균이나 3차산업 평균을 크게 능가하였다. 이 부문의 고용구성비는 81년 29.2%에서 86년 31.1%를 거쳐 91년 33.0%로 3.8%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정보서비스업과 메니지먼트관련업, 문화·여가관련서비스업의 증가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81-86년간 71.3%, 86-91년간 96.0%였다. 그 결과 이 부문의 고용구성비는 81년 0.5%에서 91년 1.6%에 달하였다. 메니지먼트관련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에 29.2%, 43.4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고용비중이 3.7%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여가관련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에 13.5%, 32.1%의 고용증가율을 보였고 고용구성비는 2.5%에서 3.2%로 증가하였다. 81-86년간 의료·보건관련 서비스업을 예외로

10) ‘종업자’는 조사기간 동안에 임금, 급여, 각종수당 등 수입이 있는 일에 한 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취업자에는 종업자와 일시휴업자 및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표 4) 산업별 종업자 구성비 및 증가율

	종업자수 (1,000인)			구 성 비 (%)			증가율 (%)	
	1981	1986	1991	1981	1986	1991	81-86	86-91
물 적 생 산 부 문	18,291	18,532	19,715	35.86	34.47	33.23	1.32	6.38
농 립 어 · 광 업	426	384	337	0.84	0.71	0.57	-9.86	12.24
제 조 업	12,896	13,351	14,096	25.29	24.84	23.76	3.53	5.58
기 초 소 재	2,856	2,836	2,804	5.60	5.28	4.73	-0.70	-1.13
가 공 조 립	5,861	6,342	6,844	11.49	11.80	11.54	8.21	7.92
기 타	4,179	4,173	4,448	8.19	7.76	7.50	-0.14	6.59
건 설 업	4,969	4,797	5,282	9.74	8.92	8.90	-3.46	10.11
유통네트워	14,086	14,831	16,055	27.62	27.59	27.06	5.29	8.25
도 · 소 매 업	11,746	12,310	13,047	23.03	22.90	21.99	4.80	5.99
금융 · 보 험 등	2,340	2,521	3,008	4.59	4.69	5.07	7.74	19.32
사회공공부	3,723	3,701	3,993	7.30	6.88	6.73	-0.59	7.89
운 수 · 통 신 업	3,401	3,383	3,680	6.67	6.29	6.20	-0.53	8.78
전 기 · 가 스 등	322	318	313	0.63	0.59	0.53	-1.24	-1.57
서 비 스 업	14,902	16,692	19,563	29.22	31.05	32.98	12.01	17.20
메 니 지 먼 트	1,889	2,440	3,500	3.70	4.54	5.90	29.17	43.44
정 보 서 비 스	275	471	923	0.54	0.88	1.56	71.27	95.97
문 화 · 여 가	1,256	1,425	1,882	2.46	2.65	3.17	13.46	32.07
생 활 관 련	4,373	4,704	5,164	8.57	8.75	8.70	7.57	9.78
의 료 · 보 건	1,806	2,053	2,181	3.54	3.82	3.68	13.68	6.23
교 육	1,964	2,054	2,189	3.85	3.82	3.69	4.58	6.57
공 무 · 기 타	3,339	3,545	3,724	6.55	6.59	6.28	6.17	5.05
3 차 산 업 합 계	32,711	35,224	39,611	64.14	65.53	66.77	7.68	12.45
전 산 업 계	51,002	53,756	59,326	100.0	100.0	100.0	5.40	10.36

주 : 매니지먼트=물품인대업, 기계수리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산업폐기물 처리업,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 조사·광고업, 문화·여가=여관·기타 숙박업, 영화업, 오락업, 개인 교습소, 생활관련=음식점, 세탁·이발·목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차장업, 자동차수리업, 기타 정비업, 의료·보건=의료업, 보건위생업, 교육=교육, 공무·기타=방송업, 협동조합, 종교,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학술연구기관, 정치·경제·문화단체, 기타 서비스, 공무, 3차산업 합계는 유통네트워크, 사회공공부문, 서비스업의 합계.

자료 : 總務廳統計局, 『事業所統計調查報告』, 全國編, 東京, 各年판에 의거 집계.

하면 생활관련, 의료·보건, 교육관련, 공무·기타 등의 서비스부문에서는 고용증가율이 전반적으로 3차산업 평균에 크게 미달하여 고용비중이 감소하였다.

서비스업부문의 고용증가수는 81-86년간 179만명, 86-91년간 287만명에 달하였다. 이 중에서 매니지먼트관련, 정보관련, 문화·여가관련 등의 서비스부문 고용증가수는 같은 기간에 92만명, 197만명이었다. 이것을 서비스부문 전체의 고용증가수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면 81-86년간 51.2%, 86-91년간 68.6%에 달한다. 결국 서비스부문의 급속한 고용증가와 그 비중증대는 매니지먼트관련, 정보관련, 문화·여가관련서비스부문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부문이 불황에 수반한 잉여노동력이나 실업자구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 서비스고용관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80년대 이전에도 서비스업의 고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고용증가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일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자체가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을 중시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정책과 서비스고용의 확대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伍賀一道, 1990: 200).

첫째, 제조업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본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전환하면서 서비스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의 다각화 내지 분사화(分社化)전략에 의해서 종래에는 제조업에서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가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서 성립하고 있다. 85년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사업다각화는 서비스업의 확장과 그 고용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기획청의 분석에 의하면,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사업다각화는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철강, 섬유, 석유석탄, 요업토석 등의 기초소재산업의 다각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업다각화의 내용은 주로 신소재의 개발, '바이오 테크놀로지', 정보통신서비스, '리스', 인력관리, 의료·복지관련, 여가관련 등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운송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등의 산업에서도 다각화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¹⁾

이와 같은 사업다각화에 의하여 서비스부문의 시설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민간기업자본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85년 고정가격에 의한 산업별 신규투자증가율을 계산하면 서비스업은 70-80년간 평균 11.2%, 80-90년간 평균 25.1%였다. 이것은 전 산업평균인 2.8%(70년대)와 11.5%(80년대)를 크게 능가할 뿐만 아

11) 經濟企劃廳, 『平成5年度 經濟白書』, 東京, 大藏省, 1993:331-334. 1980년대에 전개되었던 기업다각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小裕久, 1991을 참조.

나라 제조업의 0.0%→11.7%, 건설업 5.8%→11.8%, 도소매업 5.6%→9.8%, 금융보험업 -1.4%→12.0%, 운수통신업 0.7%→12.8%를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업의 실질자본스톡증가율도 전 산업평균의 8.5%→7.2%, 제조업 7.1%→6.2% 등을 크게 증가하는 12.8%→14.5%를 기록하였다.

둘째, 구조조정정책은 일본의 지위를 기초소재산업(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생산기지에서 첨단기술개발거점으로 변화시켰다. 더구나 구조조정정책은 대도시 중심으로 금융정보의 국제적 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은 간접부문 중에서도 특히 연구개발부문, 정보처리부문의 충실화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산업, 정보관련산업과 이와 관련한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노동자수의 증가폭이 가장 큰 부문은 연구·기술개발부문, 판매·영업부문, 정보처리부문이었으며 특히 1,000명이상의 대기업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노동성, 1989).

셋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강화된 감량경영전략이나 효율성추구방침에 따라 자본은 적극적으로 '업무의 외부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대응하여 서비스관련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 외부위탁(청부) 속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자 파견사업의 활용도 포함된다. 실제로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생산업체의 업무 중에서 수송업무의 66.5%, 급식업무의 48.0%, 기계수리업무의 46.2%, 경비업무의 44.8%,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의 40.2%, 프로그래밍 업무의 26.9%, 사원교육의 26.3%, 소프트웨어 개발의 25.0%를 외부의 다른 서비스제공업체에 각각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성, 1989: 68). 원래 이러한 일련의 업무들은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나, 감량경영전략에 의하여 이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기업내부에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것이 서비스부문의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대도시지역에서의 기업지원서비스업의 집적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문화·여가서비스나 생활관련서비스 등 소위 개인서비스업의 집적을 제고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정보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도오쿄우'권의 자본활용은 오늘날 24시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심야통근버스 운행, 심야영업음식업, '컨비니언스 스토어', 서점, '스포츠 클럽' 등 새로운 서비스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에 의하여 촉진되는 고용구조의 서비스화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직업구조를 '화이트 칼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직업별 취업구성비를 보면 전문·기술직 종사자는 70년 전체 취업자의 6.6%에 불과했으나 90년에는 두 배에 달하는 12.0%로 증가하였다. 한편 관리직과 사무직의 취업구성비는

같은 기간에 3.9%와 14.0%에서 4.4%와 19.4%로 각각 증가하였다. 판매직, 보안직, 서비스직을 포함한 광의의 서비스직은 19.4%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산직종사자는 51.7에서 37.1%로 감소하였다. 이같은 직업구조의 고도화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75-90년간 제조업부문에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증가수는 52만명으로서 제조업 전체증가수 140만명의 37.1%에 달하였다. 생산직에서는 48만명이 증가하여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직에서는 36만명이 증가하여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조업 고용증가의 62.8%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 칼라직 종사자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총취업자 증가수는 같은 기간에 511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전문·기술직이 237만명으로 46.4%를 차지하고 사무직은 123만명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부문에서도 전체 취업자 증가의 70.5%가 화이트 칼라직 종사자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용구조의 고도화는 물적 생산부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정보화·서비스화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서비스화는 생산과정에서 중간투입으로서의 서비스 투입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일본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부문의 중간투입액 중 '사업소지원 서비스'의 투입비율을 계산하면, 전 산업평균은 85년 3.2%에서 91년 5.7%로 양시점간에 78.1%의 증가를 보였다. 서비스투입이 비교적 높은 출판업은 5.1%에서 6.6%로, 화학제품업은 4.2%에서 4.7%로 양시점간에 29.4%와 12.0%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계는 1.4%에서 3.3%로 135.7%, 산업기계는 1.6%에서 4.2%로 162.5%, 기타 기계산업은 1.3%에서 2.9%로 123.1%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통신기계는 2.7%에서 4.7%로 74.1%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자동차에서도 평균 50%이상의 서비스투입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업부문의 중간투입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투입비율의 증가는 이 부문 중간투입비율의 전반적 감소와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중간투입에 대한 서비스투입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실증분석이 있는 바와 같이(日本銀行, 1989), 일본제조업은 기업의 '합리화' 내지 '생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외부의 서비스를 생산공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비스부문에 대한 왕성한 수요증가와 아울러 사업다각화에 따른 서비스부문의 신규투자 증가에 의하여 생산과 고용의 증가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경제구조 서비스화의 진전은 직업구조의 화이트 칼라화를 촉진하면서 고용구조 그 자체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70년대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 요약 및 결론

본고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초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황산업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합리화는 주로 고용량 억제에 의한 노동비용 절감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한 감량경영, 시설투자 억제에 의한 기동율 제고, 제고관리기술의 혁신, 중간투입물 및 에너지소비량의 절약 등에 의한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기술혁신에 역점을 두었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 급속한 임금인상, 엔고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황산업의 구조조정은 80년대 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일본산업은 전반적으로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따라서 수출이 촉진되면서 무역흑자가 누적적으로 확대되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통상마찰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85년 플라자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플라자합의에 의하여 엔화의 대달러환율은 급속하게 하락하였고, 엔고를 계기로 일본산업의 구조조정은 본격화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에 수반된 구조조정의 중심은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의 추진과 수입촉진, 기업의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에 입각한 해외직접투자, 본업과는 다른 사업의 다각화, 고부가가치화, 제품차별화 등에 있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산업구조는 첨단기술부문을 중심으로 고도화되었고, 더구나 80년대 중반 이후 수입저지적이고 수출의존적인 일괄자급형 생산체제는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제조업부문의 실질자급도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100%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제조업평균도 75-85년간에 125-1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실질자급도가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국내최종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것으로, 수출여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내최종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소위 일괄자급형 생산체제라는 일본의 독특한 산업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가 80년대 중반 이후의 엔고에 의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제조업 전체의 실질자급도는 91년에 119로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자급도가 100% 이하로 떨어진 제조업도 80-85년 2개 산업에서 91년에는 7개 산업으로 증가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이나 대외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주요수출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에 의하여 국내생산이 그만큼 축소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엔고에 의한 대외구매력의 강화에 따라 제품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80년대 중반 이후의 급속한 산업조정과정에서 시간단축에 의한 총노동 투입시간의 감소로 고용이 조정되었다. 이러한 고용조정의 결과 기존의 고용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정부의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아울러 중신고용제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노사협조에 의하여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됨으로써, 산업공동화에 수반된 실업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 특히 노사관계가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되었던 것은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가 수반한 단체교섭력의 약화에 있고, 그 상징적인 사건은 87년의 '연합' 발족과 1989년 '총평' 해산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자단체의 지각변동을 반영하여 동맹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쟁의 건수는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임금인상을 자제함과 동시에 조합 스스로가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용조정을 더욱 촉진하였던 것이다.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면, 전 기간을 통하여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구조조정의 주대상인 제조업에서는 생활관련산업과 기초소재산업의 취업구성비가 큰 폭으로 저하한 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가공조립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80년대 제조업부문의 고용증가요인을 분석하면, 80-86년까지는 내수와 수출의 증가에 의하거나 노동생산성의 감소나 수입의 감소에 의하여 고용이 증가한 반면 수입증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87-92년간에는 본격적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수입의 현저한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폭적 내수증가에 의하여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도 고용증가를 촉진시켰으나, 80-86년間に 비하여 그 기여도는 크게 저하하였다.

고용구조의 서비스화는 특히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서비스고용이 촉진된 요인은 기업경영의 다각화에 의하여 제조업부문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감량경영으로 서비스부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서비스경제화가 급속하게 촉진되면서 직업구조도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등 소위 화이트 칼라직종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은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고용의 서비스화와 직업구조의 고급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황산업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면서도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격의 하방경직성과 요소이동의 불완전성 등 소위 시장의 실패영역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기업이 감량경영에 의한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의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민협동에 의하여 생산요소가 사양산업에서 성장유망산업으로 원만히 이동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구조를 첨단기술부문 중심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

둘째, 직접투자를 통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과 그로 인한 국내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안정화 내지는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근로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에 의해서 가능하며, 더구나 임금보조적 성격이 강한 고용조정급부금 제도의 도입은 고용조정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조정 '코스트'로서의 실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셋째,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형성은 원만한 구조조정의 관건이 된다. 노사협조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파견노동과 같은 미조직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계를 더욱 촉진할 수도 있다.

넷째, 사업의 다각화와 제조업의 서비스경제화 촉진에 의하여 서비스부문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직업구조를 고급화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급속한 기술혁신과정에서 나타난 전자공학의 발달에 기초하여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라는 '탈공업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후발공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고 문 헌〉

金昌男 (Kim Changnam)

1992 『日本の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伍賀一道 (Goga Kazumichi)

1990 「構造調整と雇用就業構造의 變化」, 『經濟』, Vol. 312:196-211.

福島久一 (Hukushima Hisakazu) 編

1991 『日本産業의 國際的調整』, 東京, 新評論.

池田勝彦 (Ikeda Katsuhiko)

1992 『國際摩擦と日本の經濟構造』, 東京, 光洋書房.

飯盛信男 (Isagai Nobuo)

1986 『日本經濟と第三次産業』,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伊藤元重 (Itou Motoshige) 外 3人著

1988 『産業政策의 經濟分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金森久雄 (Kanamori Hisao) 編
1987 『イノベーションと産業構造』,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金森久雄 (Kanamori Hisao) 編
1990 『戦後經濟の軌跡』, 東京, 中央經濟社.
- 關東經營者協會 (Kantou Keicishya Kyoukai) 編
1993 『人事革新の具體策』, 東京, 日本經營者團體連盟.
- 經濟企劃廳 (Keizai kikakuchou)
1993 『事業の再構築を圖る日本企業』, 東京, 大藏省.
- 小林成弘 (Kobayashi Narihiro)
1990 「90年代の産業構造と就業構造」, 『月刊ESP』, No. 214: 39-44.
- 小裕久 (Kohama Hirohisa) 外
1991 「日本經濟の多角化と國際化-1980年代の經驗-」, 『世界經濟評論』, 東京, 8月號, 38-46.
- 小池洋一 (Koike Youichi) 編
1992 『日本産業の構造調整と地域經濟』,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小宮隆太郎 (Komiya Ryuutarou) 外 編
1984 『日本の産業政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公正取引委員會 (Kousei Torihiki Inkai) 編
1992 『經濟構造の變化と産業組織』, 東京, 大藏省.
- 松本正徳 (Matsumoto Masanori)
1993 『日本的經營と合理化』, 東京, 中央大學出版部.
- 三輪芳朗 (Miwa Yoshirou)
1990 『日本の企業と産業組織』,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三輪芳朗 (Miwa Yoshirou)
1992 『現代日本の産業構造』, 東京, 青木書店.
- 中野 安・明石方彦 (Nakano Yasushi・Akashi Yoshihiko) 編
1991 『經濟サービス化と産業展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日本銀行 (Nihon Kinkou)
1989 「わが國における第三次産業の擴大について」, 『調査月報』, 9月號, 東京.
- 日本興業銀行 (Nihon kogyou Kinkou)
1994 『1994年日本はこう變わる』,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 勞動省 (Roudoushyou)
1989 『經濟のサービス化とこれからの勞動』, 東京, 大藏省.
- 鈴木多加史 (Susuki Takashi)
1990 『日本經濟分析』,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高橋裕吉 (Takahashi Yuukichi)

- 1990 「リストラクチャリングの展開と日本の雇用慣行のゆくえ」, 『経済』, Vol. 312: 212-227.
- 高内俊一 (Takauchi Shyunichi) 外 編
1988 『80年代日本の危機の構造』, 東京, 法律文化社.
- 暉峻衆三 (Teruoka Shyuujou)
1990 『現代日本経済の構造と政策』, 東京, ミネルウア書房.
- 通産省 (Tsuusanshyou) 編
1990 『2000年の産業構造』, 東京, 通産省.
- 通産省 (Tsuusanshyou) 編
1990 『90年代の通産政策ビジョン』, 東京, 通商産業調査會.
- 通産省 (Tsuusanshyou) 編
1994 『21世紀への構造改革』, 東京, 通商産業調査會.
- 氏原正治郎 (Ujihara Shyoujiro)
1989 『日本経済と雇用政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誰井 彊 (Usui Tsutomu) 外 編著
1991 『日本経済論-構造變化とその對應-』, 東京, 中央経済社.
- 矢口芳生・岩城成幸 (Yakuchi Yoshio・Iwaki Shigeyuki) 編
1990 『産業構造調整と地域経済』, 東京, 農林統計協會.
- 山澤逸平・平田 章 (Yamazawa Ippei・Hirata Akira)
1991 『先進諸國の産業調整と發展途上國』, 東京, アジア経済研究所.
- Kohama H. & S. Urata
1988 "The Impact of Recent Yen Appreciation on the Japanese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Vol. 26, No. 4:323-340, December.
- Leontief, W.
1966 *Input-Output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zuki Y.
1989 *Japan's Economic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 Role*,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 Yamazawa I. & A. Hirata
1991 *Industrial Adjustment in Develope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Toky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s Industrial Adjustment and Changes in Employment Structure

Chang-Nam Ki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the Japanese economy and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following issues: "To which direction has the structure adjustment of Japanese industry been unfolded?" "By which primary factor are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in the process of structure adjustment being realized?"

After early 1970s, Japanese industry has converted its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basic material industry, which is intensive to resource to the processing assembly industry, which is intensive to technology, by giving impetus to the rationalization centering on the outage management under diverse policy supports. Moreover, until the middle of 1980s, they have reinforced the production system of full range industrialization which is obstructive to import and dependent on export in almost all the industries. But, after 1985, they moved the stronghold for production to the foreign countries and increased the product import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reflecting the rapid Yen appreciation. Thus, this production system started to collapse with relatively fast speed. In spite of the advance of this so-called industrial hollow tendency, the employment production sectors became stable by the policy support about employment stability, the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the meantime, the service tendency of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white collar tendency of job structure progressed rapidly by the expansion of service sectors based on the diversification of enterprise activities.

This fact is suggesting that the proper intervention of government about the realm of market failure, the formation of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business expansion toward new field etc. may advance the structure of employment and job highly, controlling the unemployment with adjustment cost to the minimum.

김창남,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주소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1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Tel : 051-240-2725 / 2715 (O), 051-247-2196 (H)

FAX : 02)704-8714